

□ 서울시장 후보 '빅3' 여성정책 살펴보면

취업여성위한 보육시설 확충 공통점

정원식 여성전용 직업훈련기관 설치 조순 여성정책 독립기구 신설 박찬종 기업 보육시설 지원

김미경 기자

6·27 4대 지방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각 후보들은 여성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여성유권자 수가 3백77만6천여명으로 3백66만9천여명인 남성유권자에 비해 10만7천여명이 더 많아 서울시장후보들의 여성정책 내용 경쟁도 치열하다.(표 참조)

'빅3'로 꼽히는 정원식(민자당)·조순(민주당)·박찬종(무소속) 후보가 최근 앞다퉈 내놓고 있는 여성정책 중 가장 공통적인 내용은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공약이다.

정원식 후보는 동사무소 등 각 공공시설에 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고 보육시설 설치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세제혜택 등으로 보육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순 후보는 가구당 소득 1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 시립 구립 어린이 집 1천개 설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세제 및 행정 지원 강화 등을 내놓았다.

여성관련 정책의 대부분을 보육시설 확충에 할애하고 있는 박찬종 후보는

기업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기업에 지방세 감면과 시유지 임대를 공언하고 나섰다.

여성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원식 후보는 지역별 여성전용 직업훈련기관 설치를, 조순 후보가 기존 직업훈련원의 주부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공통적으로 제안했다. 정 후보쪽이 시간제와 재택근무 활성화,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체계 강화 등 여성인력을 파트타임으로 활용하려는 색깔이 짙어보이는 반면, 조 후보쪽은 채용시 남성 균경력을 호봉에서만 인정하도록 하고 산전산후 휴가와 육아휴직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등 직장취업여성 지원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조순 후보쪽이 서울시장 산하에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심의하고 여성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서울여성프라자'라는 독립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제안해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들 후보자가 쏟아내는 정책이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당선 뒤 얼마나 지켜질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모두 유권자들의 몫이다.

서울시장 후보 '빅3' 여성정책 비교

분 야	정 원 식	조 순	박 찬 종
여성정책부서		·서울시장 산하에 '서울여성프라자'신설	
보육시설관련	·동사무소 등 각 공공시설에 보육시설 확대 설치 ·보육시설 설치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세제혜택 등으로 민간보육사업 지원	·보육시설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가구당 소득 1백만원 이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 ·시립,구립 어린이집 1천개 설치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세제, 행정 지원 ·영아보육, 야간보육 등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육시설 설치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기업 보육시설 설치시 시유지 임대 등 지원 ·민간 사회단체의 보육시설 설치시 세제지원, 시유지 임대 등 지원 ·주민자치조합형 어린이집 설립시 우선적인 재정 지원, 부지 저가 임대
어린이 교육		·97년까지 국민학교 전면급식 실시 완료 ·교육특별회계의 지방교육양여금과 서울시 일반예산 지원으로 '학교 급식 시설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 ·학교 신개척시 급식시설 설치 의무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국민학교,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시설을 방과후 아동보호시설로 활용	·방과후 아동을 위한 아동센터 설치
여성취업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간호휴직제 정착 유도 ·시간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마련 ·지역별 여성전용 직업훈련기관 설치 ·남녀고용평등법 준수 여부 엄밀히 감독 ·서울시 부녀복지계에 자원봉사담당관 두어 여성 자원봉사활동지원 체계 마련 ·서울시 행정조직내 여성공무원 하위직 편중현상 등 성차별 관행 시정	·채용시 남성 균경력을 호봉에서만 인정하도록 해 임용과정에서 평등 실현 ·여성공무원에 대한 동일한 순환보직제 실시, 연수 기회 확대 ·산전산후 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이용 활성화 ·직업훈련원의 주부 참여 프로그램 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	·지하철 성폭력 성추행 대응 위해 지하철 칸마다 '경보기' 설치 ·지하철역에 성폭력 전담경관 배치 ·매맞는 여성 보호위한 '여성의 집' 대폭 확충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	·여성, 시민단체의 여성보호시설 확대 설치 지원 ·여성피해 방지금 마련 위해 여성 보호 및 문화재단 설치

